

第215回国會
(定期會)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1月28日(火)

場 所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안
- 2.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 3.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청원
- 4. 2001년도예산안(계속)
 - 가. 해양수산부소관
 - 나. 해양경찰청소관

審査된案件

- 1.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김기춘·김용학·박재욱·박희태·손태인·신경식·이방호·이상배·주진우·허태열·윤한도·이강두·정창화·목요상·이규택·박시균·김용갑·박헌기·이상득·김호일·하순봉·현경대·박승국 의원 발의) 2
- 2.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정균환·이해찬·김옥두·장성원·강현욱·문석호·박용호·이상수·이정일·장정언·정세균·정장선·정철기·최선영·한명숙·강성구·고진부·김경재·김원기·김윤식·김충조·김태식·김택기·김효석·김홍일·남궁석·유재규·박병윤·박상천·박종우·박주선·배기운·송영진·송훈석·이근진·심규섭·원유철·이강래·이낙연·이용삼·이운수·이원성·이인제·이창복·이희규·천용택·한화갑·홍재형 의원 발의) 2
- 3.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청원(권오을·원철희·장성원 의원소개) 2
- 4. 2001년도예산안(계속) 7
 - 가. 해양수산부소관
 - 나. 해양경찰청소관
- 4. 2001년도예산안(계속) 15
 - 나. 해양경찰청소관(일부비공개)

(15시00분 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趙二濟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咸錫宰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당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농어업인부

채경감과 관련한 법안과 청원을 심사한 후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농어업인부채경감과 관련한 법안들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金泳鎭 의원 외 48인이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오늘 상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입니다.

농어가 부채정리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제2

항을 오늘 상정하여 제1항과 병행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제2항의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오늘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

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권오을·김기춘·김용학·박재욱·박희태·손태인·신경식·이방호·이상배·주진우·허태열·윤한도·이강두·정창화·목요상·이규택·박시균·김용갑·박헌기·이상득·김호일·하순봉·현경대·박승국 의원 발의)

2.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정균환·이해찬·김옥두·

장성원·강현욱·문석호·박용호·이상수·이정일·장정언·정세균·정장선·정철기·최선영·한명숙·강성구·고진부·김경재·김원기·김윤식·김충조·김태식·김택기·김효석·김홍일·남궁석·유재규·박병윤·박상천·박종우·박주선·배기운·송영진·송훈석·이근진·심규섭·원유철·이강래·이낙연·이용삼·이운수·이원성·이인제·이창복·이희규·천용택·한화갑·홍재형 의원 발의)

3.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청원 (권오을·원철희·장성원 의원소개)

(15시03분)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權五乙 의원님 등이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2항 金泳鎭 의원님 등이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3항 元喆禧 의원님 등이 소개한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에관한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權五乙 의원님 나오셔서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五乙議員** 한나라당 權五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농어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야당인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 조치법을 제출해 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번 정기국회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통과되어서 부채에 허덕이는 우리 농가에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부연설명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WTO와 IMF라는 사상초유의 난국을 거처오면서 우리 농어가의 모든 농어민들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때문에 자살을 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고 또 연쇄 도산에 야반도주를 하는가 하면 급기야는 1주일 전쯤의 100만 농민궐기대회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야당시절 농어가부채문제 해결에 정말 남다른 정열로 임했던 金大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국민의 정부가 집권후 부채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집권 3년만에 부채는 42.4%나 늘고 농가소득은 오히려 4.9%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었는데 이는 정부예산을 늘리면서도 농업투자자는 줄여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참고로 국민의 정부 이후 농업투자 축소의 모습을 보면 97년, 98년, 99년, 2000년 농림부 예산 중 순사업비는 5조8,000억, 6조2,700억, 4조2,000억, 4조4,500억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고 여기에 비해서 농가부채는 97년 1,300만원에서 99년 1,854만원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농어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부채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수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은 법제화가 아닌 정부시책만으로는 농어가 부채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마련한 5년 한시법으로서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어업인 등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중장기 정책자금 중 2조원씩에 대해 상환기한을 2년씩 연기함으로써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농어업인 등이 차입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농수산업용 상호금융자금을 5.0% 저리의 자금으로 대체지원하여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적격심사결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환은 연체 중인 농업인 등에 대하여도 자금 등이 지원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대상자와 경영 정상화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금리 인하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이차를 보전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농업인 등의 연대보증 채무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인수하여 보증함으로써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정부로 하여금 농수산물가격 변동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을 회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이러한 농업인 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농업인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8조735억원으로 추산되며 특히 초년도인 2001년도에는 1조9,535억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 예산은 시중의 금리변동에 의해서 조금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농업수익률이 3~4%에 머무는 상황에서 우리 농가가 12%의 높은 이자를 물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당초부터 빚을 지라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선진 농업국들도 농업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점을 봤을 때도 우리의 농업정책 그리고 부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농업인구는 98년 기준 647만명으로 전체인구 2억 7,400만명 중 2.4%를 차지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은 0.9%인데도 연방정부의 농업예산은 GDP비중 4배가 넘는 3.7%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 농업인구는 98년 기준 1,130만명으로 전체인구 1억 2,592만명 중 9.0%를 차지하고 농업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지만 농업예산은 총예산의 약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U의 전체예산은 920억ECU, 약 771억달러가 됩니다. 약 44.5%인 409억ECU를 농업지원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농업 인프라가 극도로 열악한 입장인데도 농업인 인구가 99년 45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비중은 GDP의 5%를 차지하는데도 농어촌 투자는 GDP의 약 9%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선진국에 비해서도 농업투자가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농업예산 9%도 실질적으로 어떤 생산성 투자를 계산하게 되면 5%대로 확 떨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임시 미봉책이 아닌 농어민의 빚 갚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임기응변적 처방이 아닌 항구대책으로서 농어가부채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으로 농어민의 부채 문제를 원천해결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비교우위에 입각한 우리나라 농어업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도시에 인구가 몰림으로써 엄청난 도시화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농업을 포기할 것인가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을 위해서 농업을 계속 지켜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시점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농어민들은 1,000만원, 2,000만원 빚을 갚지 못해서 보증채무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살을 할지언정 원금을 떼어먹겠다고 생각하는 농어민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이 부채경감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 제정되어서 농가부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그 다음에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泳鎭 의원님 나오셔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鎭議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3대 국회인 89년에 농어가부채감면에관한특별법 제정의 설명에 이어 오늘 이 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동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농어촌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실패, WTO체제 출범으로 인해서 농축수산물의 수입 개방 홍수사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개국

이래 최대의 환란인 IMF를 맞게 됨으로써 우리 500만 농어민의 고통을 계수로 표현하는 상징적 근거인 농어가부채가 크게 늘어나 총 27조원, 호당 1,86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MF기간 중 사료값 폭등으로 위기를 겪었던 양축농가가 구제역 파동으로 모든 육류의 수출 중단사태를 맞아 더욱 어려워진 데다가 2001년부터는 축산물 전면개방으로 생우마저 수입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어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농어가부채의 경감조치와 함께 땀 흘려 지은 농축수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없는 현재의 유통구조를 개혁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수출농업개척 등을 지속 전개해야 하나 우선 획기적 부담경감조치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동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UR, WTO체제 출범과 IMF경제위기 이후 농어가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농어가부채로 인하여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한 농어가가 늘어나는 등 농어촌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업인이 상환해야 할 중장기정책자금 중 2001년과 2002년에 그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자금을 2년간 거치한 후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이는 7년간 7,099억원의 자금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지원되게 됩니다.

둘째, 우리 농어업인이 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차입한 상호금융자금 중 5조원을 당초 고금리 11.5%에서 연리 6.5% 저리자금으로 5년간 대체지원함으로써 1조1,124억원을 농촌에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대보증한 농어업인이 주채무자의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대신 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리 6.5%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7년 동안 1,375억원을 지원하여 또한 농신보에 2년간 2,667억원을 출연하는 조치를 각각 단행하게 됩니다.

넷째,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연리 6.5%의 농림수산 경영개선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울러 협동조합 등은 경영정상화가 가

능한 연체자에게는 정책자금 등 자금지원과 연체 이자면제, 연체해소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원자금의 금리인하 등으로 발생하는 협동조합 등의 손실은 정부가 그 이차차액을 보전, 지원하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조치로 7년간 2조3,065억원의 농어가부채 감면의 효과를 거양하게 됩니다.

일곱째, 부채가 없거나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한 우리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농어가부채감면 7대조치를 통해서 우리 500만 농어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농어가부채문제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서 농어가부채대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농어가부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였고 농어민들의 실망과 아픔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 가야 할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농어촌의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11일 金大中 대통령께서 '농업인의 날'에 농어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농어가부채문제의 경감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이어 저희당 농어민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경감대책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16개 농어민단체협의회 회장단과 두 차례의 간담회, 학계의 의견수렴, 농·수·임협중앙회장단과의 간담회 등의 논의를 거쳐서 이번 농어업인의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췌록 동 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법률심사과정에서 우리농어민의 상처 난 농심을 달래주고 500만 농어민이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의 말씀은 이 법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상정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의 부채대책법안을 양당 안이 동시에 오늘 상정되

어 심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우리나라당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원을 대표해서 元喆喜 의원님께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議員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본 위원을 비롯하여 權五乙 의원님, 張誠源 의원님의 소개로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강춘성의 20인으로부터 2000년10월30일 제출된 것입니다.

이 청원이 제출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UR 협상 이후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된 정부의 시설 현대화, 규모화사업은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인 30대에서 50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어 왔으나 농산물값 가격의 하락과 IMF이후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청원인들에 의하면 농업수익률조차 5%정도 밖에 되지 않아 12%대의 고금리부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다시 고금리의 상호금융부채를 빌려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현장은 농가부채로 인해 젊은 이들의 과산이 속출하는 등 매우 처절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는 절실한 심정에서 농민단체가 이번 부채대책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의 주요 부채대책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자금에 관하여서는 기 집행된 모든 정책자금에 대하여 5년간 상환을 유예한 후 이를 10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금리와 향후 정책자금 운용금리를 연리 3%로 인하하고 둘째, 상호금융자금과 관련해서는 기 차입된 모든 상호금융자금을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고 이에 대한 금리는 연리 5%로 인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연체자 대책에 대해서는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경영체 연체이자에 대하여 전액 정부가 탕감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절박한 농어민의 지금 현실을 감안해서 이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부채대책 요구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부채대책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基英 먼저 權五乙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미 농가부채현황이나 주요법안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처리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예산부수 법안입니다.

따라서 농림부와 정부 예산당국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 영세민과 금번 특별조치법의 수혜 대상이 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수혜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농어가와의 형평성 등을 적정히 감안해서 농어가 부채대책 수준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법률안과 청원안의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서는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인등”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 원안과 수정의견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연대보증 대책에 대해서도 9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는 연대보증인의 책임면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신보가 연대보증을 대체할 경우에 농신보의 운영상황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金泳鎭 의원 외 48인이 발의하시고 69인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역시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법안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대한 범규정의 문제 또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채대책문제 또 연체 중인 연대보증인과 관련되는 이 법의 다른 규정과의 상호 상충되는 문제 또 정상채무상환 농어민에 대한 우대조치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취지설명에서 청원요지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 단에 역시 이 청원은 입법청원이기 때문에 앞의 두 법률안과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법안이 의원발의 법안이고 또한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발의의원인인 점을 감안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예산수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부측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정부측 의견을 물으실 부분 또는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바로 소위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張誠源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錫宰** 張誠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張誠源委員** 정부측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부수 법안 특히 내년도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특별법안이 전문 새로 만들어지는 특별법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없는 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치지 않으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요? 어차피 소위에 회부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시면 대체토론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8조5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금 張誠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를 생략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 건의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 의견에 의하면 본 법안은 우리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고 또 우리 위원회의 심사기간도 짧아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법안에 대한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법안과 청원에 대해서는 법률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五乙 법률심사소위원장님과 金龍學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張誠源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이상 여섯 분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중앙당 후원회 행사관계로 오후 4시 반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辛卿植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錫宰** 辛卿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辛卿植委員** 지금 이 농가부채특별법안은 우리 농림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전 국민들이 지금 주시하는 법안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이 법안처리여부에 대해서 아주 사활을 걸다시피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 농민단체협의회 세 군데에서 각각 안을 냈는데 그 안에 이 부채를 해소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총액의 차이가 너무 커요.

한나라당에서는 1차년도에 1조9,000억 정도를 여기에다 올렸고 민주당은 4,400억 정도를 올렸고 농민단체에서는 3조7,000억을 올렸어요. 또 총액이 한나라당은 약 8조7,000억 소요하는 것으로 했고 민주당은 2조4,000억 소요하는 것으로 했어요.

이것을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당의 입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 농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8조다 2조다 하는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이 예산소요자금에 대해서 정말 소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당이나 자기 입장보다 국민들, 농민들 입장을 꼭 좀 생각해서 임해 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96년8월에 신설된 해양수산부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나라 해양·항만·수산 분야에 있어서 많은 발전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분야의 현실을 보면 지난 8월3일 한·중어업협정의 정식서명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간 어업협정체제 구축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협정 후속조치 문제가 남아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정상화 그리고 항만공사제 도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놓여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의 구축을 통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

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정부측에 촉구한 바 있는 항만시설확충, 한·일, 한·중어업협정,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투입, 어가부채 대책, 어업관련 세제 개편안, 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 해양오염 방지대책, 불가사리 퇴치문제 등 8개 사항을 포함해서 해양수산분야의 현안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01년도예산안(계속)

가. 해양수산부소관

나. 해양경찰청소관

(16시57분)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양경찰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위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비공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두 기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셔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미래 학자들은 사이버공간에 의한 지식혁명과 더불어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청색혁명의 실현이 21세기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WTO체제의 출범은 수산, 해상물류, 해양자원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해양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여건상 해양으로의 진출이 필연적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우

나라가 이러한 국제 해양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일류 해양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해양개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 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해양부국을 향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2001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균형재정으로의 조기복귀 노력을 가속하면서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2000년도 예산 대비 7.2% 증가한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 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 항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부산 신항, 광양항 등 7대 신항만 건설사업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6대 권역별 주요 항만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에 바탕을 둔 차원 높은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중,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신어업질서에 적합한 어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대단위 양식단지 및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등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확대하는 등 선진 유통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수산물의 안전성검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산과 생활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다기능 어항과 선진 어촌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조성 및 현실적인 수산정책자금의 공급과 연근해 어선에 대한 어선공제료 지원 등을 통하여 어업경영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해양광물 및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평양 심해저 자원탐사와 조력·조류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양신물질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실용 해양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인간과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바다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환경개선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안을 안전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연안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

는 한편, 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 해상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저희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총 세입안 규모는 금년도에 비하여 3.2%가 증가된 1조210억원으로 일반회계 73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9,815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30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에 비하여 7.2%가 증가된 2조2,303억원으로 일반회계 5,740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9,81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831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507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4억원,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7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30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73억원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62억원보다 11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기타 잡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740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5,939억원보다 19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산자원 조성, 어항 건설, 어가부담대책 등 수산개발에 2,395억원, 해양환경 보전,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조사 및 해양문화사업에 766억원, 항만운영시설, 선원복지 및 교육시설, 수산기술연구 기반조성사업에 652억원, 그리고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기본적 행정경비에 1,9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76억원이 증액된 9,815억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교통세 등 일반회계 전입금 6,951억원, 선박입항료 등 항만수입 2,488억원, 용자금 이자, 유희토지 매각수입 등에 3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부산·인천항 등 기존 항만의 확충에 4,889억원, 부산신항 등 7개 신항만 개발에 3,739억원, 부산·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발 지원에 1,1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농림부에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보다 1,214억원이 증가된 5,831억원

으로서 수산물 생산, 유통가공, 어업인 육성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2,276억원, 어선감척, 어항건설, 어촌종합개발 등 농어촌특별세 전입금사업에 3,5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을 내년부터 조성하기 위해 정부재정에서 100억원이 출연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보다 46억원이 증액된 507억원으로서 영어자금에 477억원, 내항선계획조성자금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국립수산물검사소 목포지소, 국립수산진흥원 목포분소 토지매각대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목포지방해양수산기관 합동청사 신축 잔여 사업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산업자원부에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연안화물선 업계의 선박 유류비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비 보조금 79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행정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기관은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며 307억원의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교특회계 등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25억원, 선박입항료 등 항만수입 76억원, 공유수면점용료·항만부지대여료 등 영업외수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37억원, 대천·비인연안항 개발, 오천항 등 4개 어항건설 등에 사업비 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의 2001년도 예산안은 해양수산분야의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꿈과 희망의 바다를 조성하려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부 정책에 대해 깊은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가치 없는 비판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정책적 고견은 해양수산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일류 해양국가 건설이라는 국가대계를 실현해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1년도 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부 차관보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金成洙 차관보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次官補 金成洙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예산편성방향과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 주요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의 분야별 비중을 보게 되면 해운항만분야는 금년보다2%포인트 줄어든 1조648억입니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감척지원예산들이 늘어가지고 금년보다 2%포인트 늘어난 40%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해양분야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과학기술, 환경보전, 해상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수산업발전기반 조성 등은 금년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항만운영 효율 제고를 비롯하여서 어업경영 지원, 종합어촌 건설 등은 금년보다 줄어든 예산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환경보전 관련사업은 금년보다 50억원이 증가된 71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해양과학기술개발 연구투자과 개발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지원에 15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도해양과학기지 구조물 제작에 80억원, 심해무인잠수정·고속선 개발에 11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해양한국 발전프로그램에 10억원이 계상되어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의 해양수산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망간·코발트 등 전략금속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EEZ·태평양·남북극 등 국내외 광물·생물 자원의 조사 및 채취기술의 개발사업에 5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양과학, 해양환경, 연안관리 정보 등 광역해양 정보체제 구축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고, 실시간 조위관측을 위한 2개소의 조위관측소 신설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안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수질 개선을 위해서 25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염이 심한 영일만·청초호·여수선소 3개 해역 준설에 110억원이 반영되었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갯벌생태계 연구, 관리 해역 개선 등에 2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황해환경오염저감을 위해 한·중 공동조사 및 퇴적물 이동관측 등 연구에 6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10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안 침식·침수방지 등 연안정비실시와 연안 미등록토지 취득 등에 16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해양문화 창조를 위한 해양의식 고취 사업으로 2010년 세계박람회 지원에 35억, 장보고 대사 재조명·평가에 25억원 등 총 7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보다 23억이 줄어든 8,352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총 206개의 부두를 만드는 7대 신항만개발 사업에 3,73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각각 1,673억, 411억원이 계상되었고 여타 평택항,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에도 총 1,65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항만 이외에 6대 권역별 주요항만에도 2,17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에 각각 274억, 254억, 23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중국 교역증대를 대비한 군산항, 목포항, 제주 지역항에 각각 747억, 324억, 343억 등 1,41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개 일반항 건설에 1,17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지원 배후도로 개설 사업으로 551억원이 계상되었고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투자재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한 600억원의 융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항만운영의 효율제고를 위한 사업부분은 금년보다 56억이 줄어든 363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노후 관공선, 항만운영건물, 항만근로자휴게소의 보강 및 확충에 19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23척의 관공선 건조·수리에 44억, 청사·숙소건립·유지보수에 32억 등 9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인천·목포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과 해양오염방지 조합에 위탁된 16척의 청항선 운영 그리고 항만 경비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부산, 인천항의 부두관리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95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 전자문서교환망 등 해운항만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4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4개 권역의 전산망 운영에 30억원, 연안여객선 표준전산망 구축 및 사이버 해운거래 연구 등에 1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사업 중 잔여사업인 철도 4.7km 개설을 위한 연차소요로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인상으로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유류비를 신규로 7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ESCAP 역내국가와의 지역협력사업 실시 및 장기곶등대박물관의 준공 소요 등에 1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해상안전관리체제 구축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금년보다 352억원이 증가한 1,8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선박 항행안전기반시설의 개량, 증설 및 첨단화를 위해서 3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안항행선박에 정밀한 선박 위치 제공을 위한 DGPS 전국망 구축에 20억원, 남해안 협수로 및 통항 밀집해역에 연안통항 신호표지 설치에 10억원, 일반항로표지시설 증설에 98억 등 총 2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석간만이 큰 평택, 인천 2개소에 조류 신호소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2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에서 2002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자동식별장치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시설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교통정보관제 시스템의 장비의 기능 보강·유지를 위해서 28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선박폐유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IBRD차관 400만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시설운영 위탁사업비 보조로 2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항만 취약시설보수와 태풍 등 재해피해복구비로 1,300억원의 총액사업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영세한 연안여객 및 연안화물선업계의 노후선박 대체건조와 낙도 보조항로 결손보상 및 선박검사 위탁운영 보조로 159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원양성을 위한 부산·인천 해사고교지원과 선원 재교육을 위한해양수산연수원 지원을 늘리고 선원복지·고용 증진을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88억원과 6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은 한·중어업협정 발표에 대비한 피해선박 감척지원비가 크게 반영됨으로써 금년보다 1,527억원이 증가한 3,876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일 어선감척에 605억원, 한·중어선감척에 1,763억 그리고 일반어선감척과 원양어선감척에 각각 141억원, 3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르는어업 육성을 위한 시설투자와 내수면 개발, 바다목장화 사업에 39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사업은 해상, 육상 중·대형 양식단지 조성에 182억원, 양식어장·마을어장 개발에 81억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수산자원조성센터 사업은 일본측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관계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어장정화, 적조방제 등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 234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어장정화사업에 187억원, 적조방제사업에 15억원, 김유기산처리제 구입에 15억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 종묘방류 사업과 과학적인 어업자원관리 체제구축을 위해서 25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공어초시설에 235억원,

종묘매입방류에 10억원 그리고 어업자원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대체어장개발과 해외어장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조사를 위해서 각각 10억씩 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의 건조·운영, EEZ 조업어선 관리 강화 및 총허용어획량의 체계적 감시·관리제도를 위해서 94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립수산진흥원의 연구시설을 보강하고 현장에 로기술 개발과 수산특성화대학 지원 강화를 위해서 22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수산발전기금의 정부재정 출연으로 100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수산발전기금은 2004년까지 3조원을 목표로 영어자금 등 융자성 정책자금을 연차적으로 편입해서 2조원을 조성하고 또한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 운용액을 분리·이관해서 5,000억원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출연 및 신규재원으로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어업경영지원 및 다기능 종합어촌 건설은 금년보다 272억원이 줄어든 4,09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영어자금 등 직접적인 정책자금은 운영규모를 금년 수준으로 하되 각종정책자금의 이차보전소요는 전액 반영하는 원칙하에 총 1,89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영어자금 운영규모는 1조2,050억인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477억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77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자원 생산자금은 전체 운영규모를 다소 줄여서 3,310억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어망생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규모는 49억으로 하였으며 수협개혁에 따라서 일선조합의 경영개선자금으로 43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어자금, 어업경영자금 등 각종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자금의 이차보전 소요예산으로 93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항건설·어촌종합개발 등 선진어촌 정주환경 조성사업은 총 1,83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 1·3종어항과 2종어항, 육지소규모항 지원에 1,618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과 어촌휴양단지 및 전시관·과학관

건립에 각각 175억, 23억, 20억 등 2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과 전업어가 지원, 선원과 어선 공제료 지원을 위해서 27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지원을 위해서 143억을 계상하였고 전업어가 지원은 76억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선에 대한 선원공제료 지원은 49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내년부터는 1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신규로 어선공제료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어선대체·어선설비개량 등 어로서설 사업에 8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은 금년보다 269억원이 줄어든 1,001억 규모가 되었습니다.

수산물유통의 체계적 계열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물류표준화·정보화를 위해서 66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지종합처리시설에 21억원, 권역별 물류센터 조성에 31억 그리고 직거래판매장 7개소에 110억 등 총 4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에 대한 유통자금 융자와 산지수협의 직거래 수매자금으로는 각각 175억과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한 파렛트·지게차 구입에 7억원, 수산물 유통정보화 및 연구개발에 8억원 그리고 수입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투자 및 가공업체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32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천종합가공단지 조성에 109억원, 가공처리·저장시설지원에 44억, 산지특산품 가공시설에 25억원, 가공시설 현대화 개보수에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의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 12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공식품의 규격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의한 예방적 식품관리 등을 위해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威錫宰 위원장, 權五乙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행정은 먼저 내년도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 등을 감안하여 총1,39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부 및 18개 소속기관의 경상적 운영비를 343억원 계상하였고 각 소속기관, 자치단체, 수협의 비투자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3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관련 장비 증가에 따라서 본부 및 산하기관의 전산장비 유지를 위해서 4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속비입니다.

저희 부 소관 계속비는 교통시설특별회계 3건이 있습니다.

군장항 남측안벽축조와 부산신항 방파제축조 그리고 포항영일만신항 북방파제 축조 등입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연부액인 군장항 남측안벽은 300억, 부산신항 방파제축조는 253억 그리고 포항영일만신항 북방파제축조에는 41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權五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仁植 전문위원 張仁植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해양수산부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요약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번 총괄사항으로서 200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해양수산여건과 전망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특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는 무한한 해양자원의 개발 가능성, EEZ확보 등 해양영토의 확장,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 해상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강조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해양시대에 정부는 2000년5월 해양한국 21, Ocean Korea 21이라는 해양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실천전략적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해양수산 여건과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양환경의 가치 및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효율적인 해양국토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EEZ체제의 본격화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익확보를 위해서 한·일간, 한·중간 어업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내적으로는 어업인 지원사업의 조속한 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해산물동량의 증가와 해운항만서비스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해운항만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만시설을 확충하며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 선진 항만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입수산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주요현안 과제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개척정신을 국민에게 함양하기 위한 정책개발 또한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특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도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조2,303억원으로 작년대비 7.2%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6.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국가 총예산안, 일반회계 플러스 재특순세입 101조원과 대비해 보면 증가율은 6.4%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예산액은 국가예산 즉 일반회계 플러스 재특회계, 교특회계, 농특회계, 국특회계를 합한 142조3,344억원 중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만계정에 대한 교통세 배분비율이 낮아지는 등 항만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해양수산부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해양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투융자지원 확대의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 GDP 규모 중 해양수산부문의 기여도가 4.3%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이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안 중 수산분야 예산안은 8,959억2,1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2.1%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은 어선감척 예산이 2,544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분야의 주요사업비는 내년예산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항만계정 배분비율과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만건설사업 예산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에 의거 교통세 중 일부와 동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시설특별회계 법령에 의한 교통세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교통세는 도로계정에 65.5%, 철도계정에 18.2%, 공항계정에 4.3%, 광역교통시설계정에 2%를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정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의 목적이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항만계정에 대한 배분비율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99.8%가 항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말씀드렸고 항만적체로 인한 손실액을 보면 97년에 5,100억, 98년에는 3,700억, 99년에는 3,300억 이와 같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權五乙 간사, 張誠源 간사와 사회교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항만투자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SOC 투자비 중 항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1년의 13.5%에서 99년 7.6%, 2000년에 6.9%, 2001년 7.0%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항만개발비에 대한 소극적 투자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교통세의 배분비율을 최소한 10%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법령 개정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인 바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총 7,101억원입니다. 이는 이중 교통세 배분액 6,55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전입금은 546억원입니다.

교특회계 중 항만계정에 교통세 배분액 10%를 배정할 경우에 예산규모는 9,25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를 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해운업 경쟁력 확보대책에 관한 사항은 해운업계의 경쟁력 회복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르는 어업 육성과 관련하여 그 의견의 문제점을 31쪽에 제시하였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어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어류질병 전문연구기관과 어병 진료체계가 취약하다는 점, 사료공급이 생사료에 의존하고 사료공급 수준이 열악하다는 점, 새로운 기술이나 첨단 기자재가 산업화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연구결과의 실용화율이 낮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장축소 등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에 대해 폐업어선 지원, 어구비 지원, 선원실업지원금, 해외 신어장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737억 8,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폐업어선 지원을 위해 한·일 149척, 한·중 398척을 합하여 547척에 1,954억원입니다. 선원실업지원금 지급에 4,975명을 대상으로 404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 해외 신어장개발을 위해 10척을 대상으로 10억원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일선에서 문제가 됐는데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실직선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진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에 있어서는 인공어초사업의 집행주체가 시·도입니다만 사후관리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설치된 어초에 부착된 폐어망, 오·폐물을 정비하는 등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 중에서 어업무선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업무선국은 출어 어선과의 통신을 통하여 조업어선 동태 파악, 월선·피납 방지 및 기상악화시 어선의 안전대피 지도 등 안전조업지도와 해난예방업무를 수행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의 성격상 정부 위탁업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67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율이 금년의 6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는 정부업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고지원비율을 80% 이상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계형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어구 구입비 등 전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어업질서 확립사업은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지원조건은 금리 7.25%로서 적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였으며 2000년도 예산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에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전업 및 감척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99년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전국의 연안에 생계형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유념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생계유지형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험조사선 건조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수산진흥원에서 시험조사선을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금년 예산에 6,5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 합계 예산 16억2,500만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설계용역비를 확보했다면 실제로 시험조사선 한 척 건조비 16억2,500만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산발전기금이 아직 진척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수협경제사업 경영정상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 어선공제료 국고보조를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에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10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8억2,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이 허락한다면 20t 미만의 어선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물류센터 사업은 수산물의 집하·처리·보관 등을 통한 수산물의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산지와 소비지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해 물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3개소, 강원지역 등 북동권, 서울·경기 등 중부권, 전남 일원의 남서권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북동권 물류센터 건설사업은 99년에 사업수행자인 수협중앙회의 사업포기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85억7,500만원을 중부권 물류센터 건설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10월말 현재 부지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 중 30억 5,000만원은 감척사업비로 전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이 사업은 당초목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 예산안에 31억3,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代理 張誠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01년도예산안(계속)

나. 해양경찰청소관(일부비공개)

(17시47분)

○委員長代理 張誠源 다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경찰청 예산안 개요에는 방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 개요 보고를 하는 동안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안 계십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시47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10분 비공개회의종료)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첫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

의에 따라서 10분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許泰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泰烈委員 장관님 이하 관계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해수부와 관련되어서 질의만 했다 하면 항만관계를 단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컨테이너물량이 지난 13년 동안 연간 13%씩 증가되어 왔고 그동안에 해수부를 비롯해서 국내 기관들이 예측한 것보다 항상 많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전망에 의하면 2011년에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약 2,000만TEU를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00만TEU가 만약에 들어오면 이것을 처리하려면 컨테이너 선석이 114선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컨테이너 선석은 27선석이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부산신항, 광양항 이 모든 것이 다 되어도 불과 77선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 예상컨테이너 물량처리에 대비하면 불과 시설이 6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신항이든 광양항이든 빨리 지금 계획보다 더 당겨서 되어야 되고 평택항을 비롯해서 나머지 항의 중소컨테이너 부두도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산당국은, 지난번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해서 얼마나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경의선이 복원되어서 만주나 유라시아까지 다 우리가 관통이 된다면 동북아의 가장 중심적인 항구가 부산, 광양 이런 항구가 될 텐데 이 정부가 21세기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설에 이렇게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참 저로서는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盧 장관께서 이 해수부장관을 맡은 것은 대단히 참 정말 무척 다행한 일로 생각 되는데 이 나라에는 불행히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이 아닌 이상한 아주 나쁜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장관을 잡고 씨름

하는 것보다는 장관님께서 대통령을 한번 독대를 해서 이 항만시설의 확충이 21세기 한국의 국운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를 좀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서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 사업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내각에 아주 강조해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님의 불후의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항만투자가 6.8%가 됩니까? 저 산간오지 강원도, 죄송합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쓰는 도로까지 빵빵 뚫어대면서 말이지요. 인구 100만 겨우 넘는 광역시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부 다 빚더미에 올리는 지하철을 건설해 놓고, 이렇게 자원을 왜곡시키는 이런 정부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것은 장관님께서 기획예산처장관, 재정부 다 필요없습니다. 대통령 한번 만나뵙고 이것도 딱 두 분이서 독대를 하셔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옛날 선박 해운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목포 출신이라서 바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내년에는 20% 정도 투자해 가지고 내년이 안 되면 후년부터라도 이것 되어야 됩니다.

6.8%가 무엇입니까? 지금 통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114선석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가 계획한 것 전부 다 하더라도 77선석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해운업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무역외수지의 40%를 해운선박 운임으로 벌어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쟁력은 아주 좋은 선박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양질의 선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장관님 아시다시피 두 개 다 지금 엉망진창 자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느냐? 특히 선박 하나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고도의 자본집약산업인 이 선박 하나 건조하는 데도 수백 억, 수천 억이 들어가는 데 정부가 이것을 장기저리로 건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농어가부채도 지금 경감시키는데 대한민국의 무역외수지의 40%를 벌어들이는 해운업을 정부가 이렇게 방치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참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BIS 2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형선박회사들 배

건조하고 전부 다 고가의 고리대를 얻어 가지고, 정부도 고리대를 빌려준 것입니다. 계획조선의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200%를 적용하라고 하니깐 해운사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선박을 외국에 그냥 매각해 가지고 그것을 또 용선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래서 200%를 맞춰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300% 이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장관께서는 대형선박회사들 기조실장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만나보았습니다.

○**許泰烈委員**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것은 일반 제조업 같은 기준을 가지고 200%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문 닫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참 심각하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꼭 해결하겠습니다.

○**許泰烈委員** 예, 이것 장관님께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도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은 미래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겠다는 참 응골찬 대책을 가지고 총리 이하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인들, 관심 있는 일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이 독도와 관련한 각종 사료, 자료, 외국의 유사 경우의 분쟁자료 또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해서 국민한테…… 해수부에 무슨 회의실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독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거기에 오면 자료도 다 볼 수 있고 이런 정부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는 독도문제는 거론 안하는 것이 최고의 장땡이다 하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년 예산에도 또 한 푼도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이것은 대단히 국가의, 국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이 이 독도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료를 모으고 관련 온갖 대비를,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론하지 마라, 거론 안하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수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해수부의 이번 예산에 또 한 푼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예산심의 때 추가 반영건의서를 내더라도 낼테니까 이것은 상징성의 의미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황해와 양자강에서 퇴적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앞으로 한·중어업협정에 장기적으로 EEZ 확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도 지난 3년간 황해를 3등분 해 가지고 이런 황해, 양자강 퇴적물 이동현상과 퇴적환경을 연구해 왔는데 결국 3년 해 가지고 그것도 3등분 하니까 한 분야에 한 번밖에 안한 것입니다.

내년도 또 3등분 예산 중에 3분의 1 해 가지고 들어 왔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황해를 전체로 놓고 연구조사가 되어야 이것이 충분한 근거자료가 되어서 제시하고 그것이 협상력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쪼개 가지고 무슨 흥부집 이불보 맞추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 중국하고 한·중어업협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해수부의 참모들이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렇게 세상이 경천동지할 정도로 이 어업협정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나오는 자세들은 전부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관님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 지역과 관련됩니다마는 부산 서부해역에는 중·소형어선들이 악천후 시에 피항할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이서지역에 있는 해역의 어로작업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소형선박들이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그 일원에 피할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진해로 가고 저 거제도 가서 피해 있다가 악천후가 잠잠하면 다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가덕도에 2중 어항이 천성항하고 대항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성항은 앞으로 거기에서 거가대교가 넘어갈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시급하지는 않다고 보고 또 해봤자 낭비될 가능성이 많고 대항항에 대해서는 YS정부 때 10 몇억인가 투자해 가지고 일단 내항방파제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도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밖에 외항 방파제가 되어야 그 항구가 비로소 어

선이 완벽하게 피항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업무보고에 보면 2중 어항을 지원도 안하면서 그냥 지정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 된 그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대항항구는 10 몇억인가 들여가지고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외항 방파제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 부산시에 여러분이 내려준 예산이 또 10 몇억이예요. 그것 가지고 턱도 없는 예산이예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덕도에 지금 큰 신향을 만들고 있는데, 더 피할 데가 없어지는데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장관께서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의 함정근무수당 현실화가 이번에 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악천후 속에서 해경의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군하고 적어도 같은 대우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아마 협상력이 부족했는지…….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아닙니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許泰烈委員** 예산이 지금 없는데요.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자체 예산으로…….

○**許泰烈委員** 또 자체 예산이면 다른 예산 깎아야 될 것 아니요?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아닙니다. 내년도 저희 자체 염출해 가지고 공무원수당 규정을 지금 개정하고…….

○**許泰烈委員** 그러면 이것을 신규로 안 올려도 됩니까?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예.

○**許泰烈委員** 그 다음에 해경청사 문제인데 우리 전문위원이 뭔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려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아까 어디 시장이 다녀가고 술렁술렁한데 이것 분명히 하세요. 우리나라당의 입장과 방침을 여러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해경청장이 지난번 국감 종합감사 때 대전 이전 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저한테 여러 번 사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집행은 아마 재경부에서 할 것이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 여기만 우물쭈물 넘어가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어물쩍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하지 않

는다는 것을 나에게 답변을 반드시…… 나는 지금 어디 가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 朴容琿 위원이나 한나라당 위원이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와 신고소가 97개소가 노후하고 협소해 가지고 사실 해안가에 가보면 해경, 아주 형편없는데 근무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국감 때 우리 해경청에 가봤지만 그만한 청사 같으면 쓸 수 있습니다. 왜 못 쓴답니까?

지금 여러분 부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써야지요. 거기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작은 집들 다 내가 살려 주었으니까 나도 큰집, 편한데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지휘관의 지도역량이 지 지금 밑에 부하들은 그 낙후된 해안초소에 앉아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급하지 지금 인천에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직원 아파트 개보수를 못해 가지고 물 새는 아파트에, 직원들이 합상근무를 하다가 겨우 귀가해 가지고 집에 가면 물새고 노후하고 그런 아파트 개보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깎였습니다.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까? 나라가 지금 망해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정말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 아닙니까?

이것 부탁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哲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哲基委員 鄭哲基 위원입니다.

우리 許泰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 예산문제, 정말 우리 정부의 기획예산처나 예산담당부서의 획기적인 어떤 인식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장관께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국내총생산 중에서 해양수산분야의 기여도가 4.3%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우리 해양수산부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에 비해서 1.6%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산도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어선감척 예산으로 2,544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1.1%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러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살길이 바다에 있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아까 우리 許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

면 정말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의 확신을 한번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친 데 걸친 격으로 항만건설투자의 대부분의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세 배분비율도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들인지 모르겠습니다.

97년, 98년은 내부규정이 정하는 10% 수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8.2% 그리고 내년에는 7.1%로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규상으로도 1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어야 될 돈도 안 준다 이거예요. 항만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 장관께서 정말 건교부장관이나 기획예산처장관과 한번 핏대를 올려서라도 받아낼 것은 꼭 받아 내세요. 주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안 주고 이렇게 항만건설분야 예산을 삭감해 간다는 것은 이 정부가 과연 항만건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동북아의 중추국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점을 장관께서는 잘 명심을 하시고 적어도 교통세 배분비율을 제대로 찾아먹은 그런 장관이 됐다는 이야기라도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R&D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연안지역에 특히 조간대 저서생물의 자연상태로 있는 중금속 함유량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어떠 어떠한 연안의 조개에 무슨 Pb가 얼마나 들었다 뭐가 들었다 하고 떠들어대면 큰 문제가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상태에서도 모든 생물은 다 일정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양강국을 지향하려면 우리 연안에 있는 저서생물들이 평소에 어느 정도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제가 국립수산진흥원에 갔을 때도 진흥원장을 보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분야의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초조사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양강국 어찌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착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부두공단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이 항만공사가 되면 컨테이너 부두가 가지고 있는 재원, 당장 내년도에 사업비가 2,830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 차입금 원리금이랄지 공단운영비 등으로 1,926억원이 지출이 되게 되어 있어서 우선 4,756억원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대료랄지 접안료, 이월금 이런 것 등등을 다 합쳐도 1,925억원밖에 안 됩니다. 부족액이 2,831억원인데 항만공사가 출범이 되면 사실상 1,925억원도 뜬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컨테이너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장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일이라 이야기하기가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양만 진입로상의 압초제거와 관련해서 15대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해 놓은 항만 하나도 제대로 안전하게 운영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서 압초 제거작업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鄭相千 장관 시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것이 누락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언제쯤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龍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委員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입니다.

2001년도 해수부 예산 중에서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해양수산부의 장보고 관련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해상왕 장보고의 위대한 업적과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해양의 중요성 및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장보고 대사 재조명 평가사업의 중요성은 본 위원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의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보고 관련 사업예산은 2000년도에 20억원, 2001년도에 2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해진 유민 벽골군 이주지 발굴용역비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각각 9,400만원씩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소속 문화재청에도 장보고 관련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장도 청해진 유적정비 명목으로 2000년에 14억4,000만원, 2001년에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재청 예산 모두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예산인데 두 곳에서 중복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관께서는 사적 제111호인 벽골군 유적지의 발굴사업 예산이 해수부 소관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관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수부에서는 2000년도 예산 9,400만원을 청해진 유민 벽골군 이주지 발굴용역비로 김제시에 배정해 주었는데 2001년도에 9,400만원이 또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계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보고 석상건립예산 5억원이 신규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장기기본계획서상의 연도별 소요예산 투자계획에 이 사업은 2003년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당겨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맞게 삭감하고 2003년도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셋째, 문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과의 중복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의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은 관광기본법을 근거로 수립된 정부계획으로서 부산을 거점으로 한 부산 도시관광권,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스포츠관광권, 여수·순천·광양 등 8개 시·군으로 이어지는 종합휴양관광권, 목포·완도 등 8개 시·군 중심의 역사문화관광권 모두 4개 권역으로 설정되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보고 관련사업은 이중 목포·완도 등 8개 시·군 중심의 역사문화관광권에 포함되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49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기본계획은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162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남해안 관

광벨트 개발계획보다 무려 1,666억원이 많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기간인 2005년까지 투자비만 비교해도 495억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정부부처간 중복되면서도 상이한 계획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관께서는 문광부의 계획과 해수부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계획을 우선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중복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부의 장보고사업 기본계획서상의 연도별·분야별 투자계획과 예산확보 실적을 대비하여 본 위원에게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상 인물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 해상왕 장보고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경우는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해수부가 3,162억, 문광부가 1,496억, 문화재청사업 20억4,000만원, 도합 4,678억4,000만원입니다. 장보고 한 분에 관한 예산입니다.

해수부장관은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도 본 건 장보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해수부의 용역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해수부의 2001년도 예산 중 용역비를 살펴보면 해수부가 과연 사업추진부처인지 연구용역부처인지 얼핏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해수부는 총 75건에 285억2,4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구용역비는 50건에 158억8,800만원,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6건에 67억5,000만원, 위탁사업 관련 용역비로 6건에 57억500만원, 행사 경비 관련 용역비로 3건에 1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1건당 평균해 보면 1건당 3억8,0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 먼저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현실적 필요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이 안다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용역비 중에 상당부분은 중복계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과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도 있어 보입니다. 중복계상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농림수산행정부문의 기관운영 항목의 정책연구개

발비 5억6,400만원과 운영지원 항목의 해양정책연구개발비 1억원, 수산정책연구개발비 1억500만원, 안전관리실의 기본사업비 3,000만원, 항만국의 기본사업비 1,000만원 등 8억900만원은 모두 정책과 제연구를 위한 용역비로서 중복계상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책연구개발비, 해양정책연구개발비, 수산정책연구개발비, 기본사업비 이 용역사업명만 봐도 중복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어촌부분 수산생산 항목의 해외어장자원조사용역비 8억6,300만원과 어업자원관리용역비 9억8,200만원, 그리고 어업자원관리 항목의 기르는어업잠재력조사용역비 4억3,600만원 등 22억8,600만원도 유사사업으로 중복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예산은 과감히 삭감조정하거나 통합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행정의 해양조사자료관리시스템 구축과 해양과학정보시스템, 해양환경정보시스템, 해양폐기물처리시스템 등 30억7,200만원도 중복과다계상된 용역비로 보이는데 역시 과감한 삭감과 통합운영이 요구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업목적이 불분명한 사업도 과감히 조정해야 됩니다. 해양정책 항목에 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한국발전프로그램은 무엇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리고 또 선박이전 항목의 선박검사기술협회 위탁사업도 47억6,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위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복 또는 과다계상되어 있다면 신중히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서 해수부의 이런 용역비에 대한 2000년 대비 유형별 비교분석내용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正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正彦委員 민주당 張正彦 위원입니다.

먼저 한·일수산자원조성센터사업은 2000년 금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는 일본측 준비상황을 감안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차관, 차관보 그리고

실무자가 수 차례에 걸쳐서 일본에까지 가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차관·차관보·실무자들이 수 차례 출장을 가서 상당한 예산을 쓰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또 그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일본측의 준비상황이 안 되어서 금년에는 100억이 계상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아예 예산에도 올리지 않고 한·일수산자원조성센터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전국의 17개 어항이 1종항으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 중에 6개항에 대해서 30억의 예산을 갖고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30억을 갖고 어항의 실시설계를 한다?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요? 실무자 얘기해 주세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安國全** 예, 그렇습니다.

○**張正彦委員**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국에 설계를 할 수 있는 토목능력과 자격이 있는 우수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는 시설국에 있는 우수한 공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30억씩이나 들이면서 외부에 용역을 맡긴다는 것, 가뜰이나 어려운데……. 전에는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바로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서 다시 설계를 합니다.

또 하나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시설계를 총괄설계로 해놓으면 조달청에서 총괄입찰을 하게 됩니다. 전규모를 갖고 입찰을 하는데 지금 매우 공정하지 못한 입찰행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이 있을 때만 해도 동아, 대우 이퇴출 대기업들이 광양만 지역의 공사를 독점수의 계약을……. 총괄설계를 하고 총괄입찰을 하게 되면 일부 대기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아주 부조리가……. 저는 이것에 대해 앞으로 더 아주 깊이 현실을 직시할 생각입니다마는 조그마한 어항개발을 하는데 총괄설계를 하고 총괄입찰을 하면 대기업들이 와서 담합을 해서 그 시골 낙도에 있는 그것까지 다 독점을 해버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어려운 때에 어항의 실시설계만은 아주 능력도 있고 자격을 갖춘 공직 공무원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면서, 또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이 30억의 실시설계비에 매우 유의해서 이번에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본 위원은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농외수입이 80%가 된다 말입니다. 가뜰이나 우리 어촌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것에 착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농업 갖고 수산업 갖고는 매우 어려운데 그외의 사업, 말하자면 어촌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또 그 지역의 문화와 연계시켜서 어떤 마을을 조성하면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나 외국에 있는 관광객까지도 찾아서 체험하고 그것이 소득으로 직결이 되고 매우 유익한 사업이다 저는 찬사를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4일 날짜로 대상마을을 각 시도에서 추천을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는 5월10일 현지조사·심사를 하고 대상마을을 선정까지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또 체험프로그램개발계획 같은 것도 다 세웠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사업을…….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드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도비, 시·군비가 있어서 각 지역에 10억의 50%인 5억씩만 지원해 주면 시범사업으로 아주 훌륭하게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주장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관께서 유의해서 어떠한 성공사례, 시범사례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모범된 것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우리 어촌을 살리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鄭哲基**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통세 배분관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세특별회계법령에 의거해서 교통세 배분비율을 10% 이상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관련된 부처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법 시행령을 개정을 요망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孫泰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仁委員** **孫泰仁** 위원입니다.

해수부 내년도 세입세출을 보면 평균치보다는

약간 증가하는 그러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해양한국을 지향하는 해수부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할 일은 너무 많고 돈은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수산진흥원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나 경상비보다도 사업비가 적은 이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 차원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시험조사선 건조 이것은 설계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험조사선 건조 자체가 16억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적조조사, 연안환경조사, 연안어장관리, 어패류위생조사 등에 신속히 대처해야 된다는 이러한 긴박한 사업을 위해 가지고는 이 시험조사선이 반드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보다도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저의 입장도 좀 묘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안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수진원의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더 나아가서는 특허출원, 전문학술지 게재 등 간접연구활동지원 이러한 부분과 해양환경의 급변에 따른 현안 연구과제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절대부족이다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 1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부산항 항로준설문제가 아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설비로 요청한 60억7,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항만의 환경변화는 급속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항로 수심을 측정해 보더라도 부산항 같은 경우 12m에서 14m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형선 6,000t급 이상이 곧 입항할 텐데 그러한 입출항을 지금의 부산항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듭니다. 부산신항도 자꾸 지연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항만환경은 급속하게 세계에 뒤쳐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설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따른 대책도 좀 마련할 길이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직선원 직업훈련비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원 실업지원금은 4,975명에 대해서 6개월분 404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업훈련비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3항에 의하면 해수부장관은 실직어선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명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감척되는 것만 하더라도 547척인데 실직인원수가 한 5,000명에서 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선원실업대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항만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배후도로 건설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만 하더라도 교통체증유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내년과 또 2002년 상반기에 건설이 완료되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차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광안대로건설, 제3도시 고속도로 건설 그 다음에 부산신항 배후도로 이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許泰烈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입니다마는 이 세 도로 건설에 관해서는 내일 예산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榮委員 崔善榮 위원입니다.

21세기는 해양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비한 투자와 준비에 본 위원은 매우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보면 미래 해양산업을 위한 우리의 관심이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문에 관한 예산규모가 전체 국가예산 142조3,344억 중 1.6% 에 불과한데 이것은 국내총생산인 GDP의 대비 4.3% 밖에 안 됩니다. 2001년도 예산이 2000년 예산보다 증액되었기는 하나 문제는 많은 예산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중, 한·일어업협정 등 국제협약으로 인한 어선감척 예산으로 2,544억원이 계상되어 실질적으로는 증액되었으나 이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 감척예산 840억원보다 1,704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여기서 감척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인 해양수산부예산은 1.1%인 210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된 대상은 미래의 투자인 기르는어업 육성사업과 수산물 유통부문의 시설부문 투자가 평균적으로 20 내지 25% 축소 조정된 것입니다.

이렇듯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축소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를 버리는 일과 같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조정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제간의 어업협정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자원의 축소 그리고 자원고갈로 인하여 수산업의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접산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척에 대한 예산행정의 잘못으로 남아 있는 어선선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감척어선에 대한 보상비가 지급되는 모습을 보면 먼저 감척을 희망하는 지원어선을 받고 그 어선들로부터 연평균소득에 대한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감척대상 선주에게 3년간의 소득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신고하는 선주들의 소득통계를 보면 매월, 매일 적자라고 하면서도 그 선주는 갑자기 근 몇 년 동안 대대적인 흑자를 이루고 있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선주들은 선박의 적정가격보다 2배 이상의 보상비를 신청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행정적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장관님이 처음 해양수산부에 취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업인들은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어업인들의 애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장관의 업적이 남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행정적 착오나 또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꼭 관련 공무원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 관련자하고 또 선주들 간에 좋지 않은 관계도 이루어지

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잘 해 주시는 것도 장관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許泰烈 위원도 지적하고 다른 위원들도 다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오늘은 가만히들 계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다.

해경청사이전예산 40억 그것은 수도권정비법이 1월1일부터 공공청사는 증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경인일보나 지방지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인천에다 꼭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을 해 주십시오 해서 수도권정비법이 정말 안 풀리고 또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그러면 이 예산을 좀 아까 말씀한 목포, 인천, 어디 여수라고 했습니까? 옛날 경찰서가 낡은 데가 있는데 한 군데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찰서를 개축을 하시는데 쓰든지 저는 백령도, 대청도, 웅진반도 섬 일대를 잘 다닙니다마는 이런데 해안초소들을 보면 그것이 초소인지 전시에 예비군훈련 받는데 인지 모르게 생겼습니다. 이런 초소를 짓는 데 쓴다든지 또 예를 들면 아까 許泰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임대아파트라도 개보수하는데 쓸 수 있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許泰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청장님의 참 좋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燾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燾太委員 朴燾太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수산관계 예산이 한 736억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을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감척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朴燾太委員 그러니까 감척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한 부분의 것이고 수산분야의 전통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감척이라는 것은 한·일어업협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중국과의 어업협정등을 감안해서 마련한 예산이고 지금 이것을 제하면 730억이나 예산이 줄어졌다는 것은 다른 일반예산과 비교해 볼 때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평소에 계획되거나 예

측되지 않은 지출이 발생할 때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예비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재원을 마련해서 특별히 조달할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전체예산을 짤 때 바깥으로 보조를 받고 자기살림 허리띠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상황을 넘겨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煥太委員** 글썽요, 장관 혼자서 예산을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같은데 정부예산 자체는 금년에 한 6, 7% 증가된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朴煥太委員** 일반적인 그런 증가의 추세에 반해가지고 수산관계 예산이 줄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수산분야에 투자를 안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수산에 대한 경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朴煥太委員** 제 수치가 맞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아니, 그것 말고요.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수산부문만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건설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같은 것이 약 7, 8% 가까이 다들 삭감되고 특히 농업부문 예산도 사업비 예산이 7, 8%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예산구조가 변경되면서 예를 들면 복지비 지출이라든지 사회보장비 지출이라든지 환경부문에 있어서의 예산이 좀 늘어나고, 제가 해수부장관으로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꼭 할 일은 아닙니까라는 실제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만 특별히 손해본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장관 되기 전에 얼추 틀이 다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가예산의 흐름이 바뀌면서 된 것인데 적어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체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지출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총액으로는 더 받고 그러니까 감축예산이 부분적으로는 지원을 더 받으면서 또 자기살림을 좀 줄인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朴煥太委員** 장황한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수산분야라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 낙후되어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다른 분야보다도 이쪽에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앞으로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煥太委員** 그런데 이것이 줄어졌다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장관이 늦게 해수부장관이 된 그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저도 짐작은 갑니다마는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것을 좀 문제 삼아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야가 지금 한 730억 줄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장관께서 잘 파악 못하시면 기획관리실장입니까? 누가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가 줄어서 730억이 줄어졌어요?

○**海洋水産部次官補 金成洙** 여러 부분에 걸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어초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유통부문에서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朴煥太委員** 정부가 지금 입만 열면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기르는 어업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초라든지 또 기르는 어업에 투자를 오히려 줄여 간다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정부가 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일시적 감소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朴煥太委員** 내년 1년만 참으라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를 들면 특별감축 예산이 있는 동안에 일시적인 감소로 그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朴煥太委員** 감축하고 수산분야의 예산하고 너무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감축을 어디 어민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정부의 그런 어업협정이라는 큰 테두리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어업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당신들을 배려한다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적어도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것을 좀 상의를 해보

세요.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증액해야 됩니다.

줄인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낙후한 산업분야를 줄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장관께서 아, 그 힘 두었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처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올리도록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고테구리 이야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까? 마는 소형기선저인망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이것도 문민정부 때 수립되었다가 작년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예산상으로는 무대책이에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단지 불법어로라 그래 가지고 단속하는 것만이 대책입니다. 단속은 지금 옆에 계시는 해양청장이 적절히 하는데 결국 국민들 이것은 처벌하고 교도소 보내는 것 이상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상의 대책이 없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朴燾太委員** 돈 가지고 해결할 문제인데 지난번 국감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감척 등의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수십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불법어어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또 이것이 생존권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재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 검토의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고테구리를, 소형기선저인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소액일 것입니다. 그 용역예산이라도 여기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들으니까 우리 장관께서도 이 고테구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어도 내년예산에 용역비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선공제료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나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검토보고서에서만 나왔습니다.

○**朴燾太委員** 이것 지금 20t 미만의 소규모어선에 대해서는 수협이 어선공제회에 가입할 때 국고에서 공제료의 50%를 보조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내년엔 보면 이것이 10t 미만의 경우에만 국고보조 50% 있고 10t 이상 20t 미만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 봐야 28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t 미만 전 어선에 대한 공제료 50%를 국고에서 부담해 봐야 28억밖에 안 됩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이것을 바라고 또 청원도 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수협에서도 이것을 간절히 또 바라고 있고 그러는 데 돈 전체가 28억 입니다.

그런데 10t 미만은 이미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20t 까지 확대하는데 돈이 한 10억 남짓 들 것입니다. 이것 하나쯤 해주는 것이 어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가 되고 맨날 슬픈 뉴스만 있는 어업의 현장에 그래도 좀 힘이 나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장관께서 특별하게 좀 배려를 하는 그런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그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姜賢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賢旭委員** 姜賢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朴燾太 위원님께서 어초시설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금년에 360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초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235억으로 125억이나 줄어 있습니다. 어선감척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어초시설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어초시설은 줄였지만 종묘매입 방류라든지 어업자원종합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데로 역점을 좀 바꾸었다, 이 어초시설은 줄이고 대신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종묘매입도 보니까 5억밖에 안 늘었어요.

그리고 어업자원종합데이터베이스도 10억밖에 안 늘었는데 15억을 늘리기 위해서 어초시설에서 125억을 깎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어초시설은 제가 볼 때는 연안에 기르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시설인데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하다가 안하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은 계속해서 확충을 해야 되고 또한 가지 문제는 이것을 시·도로 배분을 해주는데 배분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인구비례로 하는지 어선비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도에 배분을 하면 시·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또 배분을 해요.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적당히 나누어주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사람, 시장·군수들이 관리를 전혀 하지도 않고 또 필요 없는 데 그냥 어초시설을 갖다 던져 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 데는 어초시설이 안 가고 필요 없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시·군에 이 어초시설이 많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전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장이나 군수한테 맡겨 가지고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125억이나 깎은 것도 문제이고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배분방법이, 관리를 체크하는 방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데는 안 가고 필요 없는 데 폐어망 같은 것이 막 휩싸여 가지고 전혀 쓸모 없게 된 어초시설이 전국에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소나 시·군에서 이것을 배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필요한 데 이것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현년도 수준 정도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장관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고 내일 소위원회 예산을 심의하게 됐는데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구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산에서 어청도까지 배가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갔다하는데 편도가 무려 42마일입니다. 그리고 전국 바닷가의 바람의 속도가 초당 3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청도 가는데 평균 초속 6.2m, 그러니까 서북풍이 엄청나게 부는 42마일의 항로를 달리고 있는 여객선인데 이것을 새로 짓는데 40t짜리를 10억을 계상해 왔어요. 40t 짜리는 내항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42마일을 서북풍을 맞으면서 어청도까지 가려면 200t, 아무리 적어도 150t은 되어야 되는데 40t으로 계상한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런 배는 건조를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이 부족하면 2년에 걸쳐서 지어도 되는데 40t으로 계상한 근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산진흥원에 국감을 가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연안의 기르는 어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어병, 고기의 병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리도 바이러스 같은 것이 퍼져 가지고 60억 가량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병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어병방역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장비확충 예산으로 20억을 올려놨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전부 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려놓아야 됩니다. 고기를 기르는데 무슨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폐사를 하게 해가지고는 연안어업이 안 되지요. 그래서 다른 데를 깎아서라도 이 어병방역센터 기초적인 운영비, 그리고 장비 확충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장관께서 예산투쟁을 좀 소홀히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만예산도 제대로 못 찾았고 항만예산에 비해서 수산부분이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좀 분발을 하셔야 될텐데 옛날에 항만청이 건설부에 소속해 있을 때는 큰 집 안에 붙어있어 가지고 많이 챙겼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되어 가지고 완전히 한테가 됐다 이런 푸념을 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책임이 큰 것이지요.

그리고 수산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농림부에 소속된 청일 때는 큰집에서 돈도 좀 따주고 나눠주고 했는데 이것이 독립이 되다보니까 수산예산이 자꾸 줄어든다 이거예요.

사실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도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GDP에 기여는 많이 하는데 돈은 못 찾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장래가 어두워지는 거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장관님이 좀 분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정회하고 저녁식

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9시가 넘어야 되겠기에 너무 늦어서 우선 정회하고 9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21시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朴容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琥委員**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2년 6월에 세계박람회사무국(BIE)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최종 유치국가를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박람회사무국은 88개국 중에서 유럽이 31개국, 미주가 26개국, 아시아가 14개국이고, 중동·아프리카가 1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2001년도 외교활동이 유치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2010년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국가 중에는 유럽의 아르헨티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르헨티나도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고 또 두 번이나 개최하려다 실패한 캐나다도 있습니다. 호주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튼 유치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10년 세계해양박람회의 최종 유치국가가 우리나라로 결정될 경우에 20여 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4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치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2001년도 정부예산에 국비지원액이 35억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증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소한 50억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체에너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유가는 배럴당 30달러 이상으로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에너지소비국이고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세계 1위, 또 총에너지의 98%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 고유가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양에너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력발전 같은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눈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력발전은 최대유속이 5노트 이상이면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했습니다마는 노스이스턴 대학의 물리학 연구학자이시고 수력발전연구소 소장인 고를로프 박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해남-진도 가는 울돌목의 유속이 12노트로 조류발전의 최적지다, 이런 좋은 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하지 않는 것은 조상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고를로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최대유속이 아주 빠른 강화도 섬돌목, 이 돌목이라고 붙인 곳이 아주 유속이 빠른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강화의 해안선, 그리고 제주 성산읍 우도 수로, 북제주군 인근지역, 경남 삼천포 늑도 해역도 조력발전소 건설지로서는 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해주가 조력발전의 최적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kW에서 400만kW의 조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조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해서 해양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청정에너지인데다가 대단히 부가효과가 높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도 2001년도 예산에 5억원을 책정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을 시행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당장 해남의 울돌목, 또 강화·제주지역의 조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검사를 위해서라도 그에 필요한 예산 19억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저도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어업지도선 증강대책, 아까 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경비정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어업지도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25척인데 이중 5척은 감척어선을 지도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개조 중에 있고 또 교대근무하기 위한 대기선박, 수리 중인 것 등을 제외하면 실제 바다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지

도선은 10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지난 8월 3일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어서 2001년도 초에 발효를 목표로 하고 양국간에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 어선은 잘 알다시피 과거부터 어장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기상이 불량하거나 야간을 틈타서 우리 영해에 침범해서 불법조업을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상이 악화될 때 제주도 인근 항·포구에 집단으로 피항을 하면서 쓰레기를 마구 투기한다든지 분뇨를 방류한다든지 연안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선 부족으로 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라서 EEZ 체제에 따라 관리해역이 영해에서 EEZ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역에 입어한 일본과 중국어선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어업지도선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업지도선 세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꼭 해야 될 청사이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몇 분 안 계시네요. 하여튼 해양경찰청 청사는 국감시에도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인천에 잔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리하게 대전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갈 때에는 예산도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렵게 따낸 45억원을 삭감하는 것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오늘도 보니까 대전시장이 올라와서 로비를 한다든지 우리 상임위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李良熙 총무가 오셔서 독려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꼭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나도 인천광역시장을 불러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꼴이 우습고요. 그래서 이것은 벌써 여야위원들이 다 감사시에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미련을 남기고 이렇게 꼬리를 계속 감추시면서 물밑작업을 한다면 저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는데 이 대전청사 이전부지 둔산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터미널부지에 모델하우스가 모두 철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분양이 끝나서 철거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해경청사 신축을 위해서 빨리 철거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철거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朴容琬委員** 까맣게 모릅니까?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朴容琬委員**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이전 재검토라는 결정 이후 해경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잠시만 조금 움츠러 태풍을 피하면 조금 있다 대전으로 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그렇지 않습니다.

○**朴容琬委員** 그런데 본 위원회의 위원회관에는 밤새 지금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을 주면 대전으로 이전하기가 쉬우니까 의원님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만큼 그 내에서 직원들도 대전으로 가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예산을 다루시는 그런 위원님들과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어렵게 따신 45억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한다는 것은 저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경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고 거기에 대한 청장의 확고한 말씀이 있는 후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方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委員**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협법 개정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

체로 해수부에서 대강 안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李方鎬委員** 그런데 기본적으로 총회라는 것은 임원의 선출, 해임 그리고 임명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을 보면 신용대표는 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소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특정부분에 대한 대표가 총회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해서 선출된, 소위 소이사회에서 선출된 그러한 대표가 신용대표로서의 어떤 그리고 직접 어민을 대표하고 어떻든 수산업협동조합의 범위 안에 있는 그러한 조직의 대표로서의 정통성과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협동조합의 원리 그리고 자율경영의 원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동안의 협동조합 운영결과가 결국 공적자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편이고 또 공적자금을 주는 쪽에서는 어떻든 그 신용부분을 책임경영을 확실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다시 부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李方鎬委員**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총회의 동의를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관변단체 비슷하게 소이사회의 동의를 더 중요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책임경영이라고 그러면 또 경제대표는 어떻게 해서 총회의 의결을 받으니까? 같은 조직 안에서 신용대표는 소이사회에서 그리고 경제대표는 총회에서, 그런 논리적 모순이 어디 있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 문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 받는 과정에 있어서…….

○**李方鎬委員** 아무리 공적자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협동조합의 본질이라든지 협동조합의 공익성이라든지 정통성 그런 문제는 훼손이 안 되어야지요. 그럼 차라리 안 주든지, 준다고 해서 기본적인 원칙,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이지요. 최소한도 무슨 대표를 뽑는 것이 관선이사를 뽑아 가지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용대표 그리고 경제대표를 거의 다 해수부에서 추천을 한다면 서요?

돈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무슨 권한으로 해수부에서 사람 두 명을 추천한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협동조합을 끌고 나가서 되겠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도 저희 고민입니다.

○**李方鎬委員** 고민이 아니라 아예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협동조합에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돈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方鎬委員** 이야기 해 보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제가 추천했습니다. 했는데…….

○**李方鎬委員** 어떻게 추천했어요? 무슨 권한으로 추천했어요?

장관이 어떻게 해서 협동조합에 대표추천을 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잘한 것이에요? 지금…….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목소리……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李方鎬委員** 무슨 이야기요? 지금 잘한 일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이요? 무슨 권한으로 추천했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李方鎬委員** 장관이 말이야 부당한 짓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당당히 이야기 하니까 그런 것 아니요. 해수부가 어떤 권한으로 했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제 스스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입니다.

○**李方鎬委員** 어째서 부당 안 해요? 공개적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개적으로 간통하면 그것은 간통이 아니에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간통하고는 다르지요.

○**李方鎬委員**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억지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 협동조합에 말이야 해수부에서 대표를 갖다가 전부 추천하고 그래 놓고 정당하게 잘 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서 했습니다.

○李方鎬委員 그것이 어떻게 합법적이야? 어디 법에 있어요? 그런 것이…… 여기 실무국장 누구예요?

합법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합법적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이에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朴宰永 지금 추천과정에 대해서 수협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李方鎬委員 수협법에, 수협법 몇 조에 해수부장관이 추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문제는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李方鎬委員 그럼 장관이 답변해 보세요. 무슨 조항이 있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장관이 책임지고 하고 있으니까 장관에게 질의하십시오.

○李方鎬委員 장관이 책임진다고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느냐 그 말이야.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장관에게 질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들어주십시오.

○李方鎬委員 어느 법에 있어요? 수협법 몇 조에 있어요? 언제부터 장관이 말이야 그렇게 무소불위한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무소불위가 아니고 총회에다가 추천…….

○李方鎬委員 추천권한이 어디 있느냐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추천하는 것이예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사실상의 권고행위입니다.

법적 권한으로서 행사한 것이 아니고…….

○李方鎬委員 법적 권한을……. 권고는 또 뭐야. 권고는 또 어떤 권한의 권고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사실상의 권고행위로서 한 것인데 그것이 불법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李方鎬委員 불법을 해놓고 책임져야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권한에 의해서 권고하고…….

○朴煥太委員 그러면 추천을 취소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수협이 자체적…….

○李方鎬委員 수협이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정부에서 도와주면 도와주는 것이지 왜 협동조합에 대해서 인사권에 관여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李方鎬委員 왜 아무 일도 못 해요? 왜 그러면 신용대표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리고 절대로 월권한 것은 아닙니다.

○李方鎬委員 신용대표는 소이사회에서 하고 왜 경제대표는 총회에서 하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은 앞으로의 법안 이니까 여기서 다루시면 됩니다. 다루시면 되는데 그런 것은 서로…….

○李方鎬委員 장관이 잘못된 것은 못된 것으로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지 무슨 권한으로 협동조합의 대표이사를 선출하는데 장관이 전부다 사람 추천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장관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알음해서 추천한 것도 아니고요 수협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회원조합의 조합장들과도 협의했습니다.

○李方鎬委員 수협 입장에서 볼 때는 장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따라 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들끼리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결코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方鎬委員 왜 부당한 일이 아니예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어떻든 그러면 수협의 총회에서 장관의 추천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고 문제 삼으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도 어떻게 하든지 장관으로서는 그 문제를 손을 떼라고……. 수협의 총의로 장관이 손을 떼라고 하면 손을 떼겠습니다.

○李方鎬委員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서로 상식적으로 타협해서 하는 일을 가지고, 비상사태 아닙니까? 앞으로 장관이 수협을 운영하자는 것이 아니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수습하는 과도기적으로, 과도기적 조치로서…….

○李方鎬委員 그리고 장관, 어떤 의미에서든 장관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수협이 지금 이 지경에 빠졌는데 장관이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方鎬委員 관계하는 것이 추천하는 것이예요? 장관이 해야 될 일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수협을

이끌어 주는 것이 장관의 도리이지 장관이 어떻게 특정인을 추천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을 이끌어 주는 것이…….

○**李方鎬委員** 이끌어 주는 것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장관이 나 몰라라 하면 그것은 잘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협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것은 없고요…….

○**委員長 咸錫宰 李方鎬**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그 다음에 답변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세요.

○**李方鎬委員** 그런 식으로 장관이 말이지요 역지를 쓰면 안 됩니다.

돈 주는 것은 장관 돈 주는 것 아니고 정부가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협의 어떤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조치예요. 왜 개인이, 장관이 거기에 관여를 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지 않습니다.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과도적 조치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월권을 행사한 일은 없고 조합장들과 만나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고…….

○**李方鎬委員** 그 조합장이 장관보고 추천해 달라고 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양해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李方鎬委員** 그러니까 조합장들과 만나서 간담회 하는데 조합장이 장관 보고 그 대표이사 추천해 달라 그래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수용했습니다.

○**李方鎬委員** 일방적으로 가서 장관이 발표했잖아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의가 있으면 반대할 것 아닙니까?

○**李方鎬委員**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委員長 咸錫宰** 장관께서는 답변을 이따 한꺼번에 같이 하세요.

李方鎬 위원님은 질의 계속 하시고요.

○**李方鎬委員** 그리고 이런 법이 또 어디 있어요?

이사회 의결사항에 이사회 의결범위 안에서 소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조직이든 이사회가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소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신용대표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번복할 수 없도록,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재경부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기획예산처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금감위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해수부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중앙회에서 한 사람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변이사 소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결의는 이사회에서 간섭할 수 없도록 해놓은 그런 제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법이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저는 과도적인 조치로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方鎬委員** 과도적인 조치는, 법은 법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과도적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李方鎬委員** 과도적으로라도, 이것이 지금 혁명하고 있는 거예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영원히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李方鎬委員** 법체계라든지 법 이론상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지금 무슨 혁명전야예요? 지금 수협이…….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혁명전야가 아니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李方鎬委員** 뭐가 불가피해요?

○**朴熿太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朴熿太委員** 지금 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이 해수부의 인사정책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좀 중단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정회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委員** 정회해 주세요.

○**委員長 咸錫宰** 우선 李方鎬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李方鎬委員** 아니, 일단 정회하고 나중에…….

○**委員長 咸錫宰** 정회여부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한번 해보고서 하겠습니다.

○**李方鎬委員** 정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 못해요.

○**文錫鎬委員**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文錫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文錫鎬委員** 지금 질의응답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관께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하셨거든요. 정확한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으니깐, 제가 듣기에는 충분하게 답변을 하실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진행 여부에 관해서 굳이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 장관의 최종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계속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鄭長善委員**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鄭長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鄭長善委員** 지금 우리 李方鎬 위원님 질의내용을 저희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확히 문제 된 것인지 계속 소란 속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정회하는 것보다도 정확히 무슨 질의한 것인지 답변을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중요한데 이 수협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그 다음에 文錫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文錫鎬委員**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머리를 좀 식히는 의미에서 가볍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우리 해수부예산이 감축예산 빼면 많이 줄었다, 특히 수산분야예산은 형편없이 줄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좀더 우리 수산행정에 대한 열정을 좀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제가 국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예산을 보면 기르는 어업의 육성예산은 565억에서 398억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무려 29.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그리고 수산종묘 방류 등의 어족자원 조성관리사업 예산도 금년에 365억에서 내년엔 255억으로 무려 30.4%가 줄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을 했던 어장환경개선 예산도 11.4%가 줄었습니다. 특히 수중 침적폐기물처리 예산은 해수부에서 220억을 요구했지만 금년보다 15억원이 줄어서 85억만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수부에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겠다 또 해양환경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보면 여태까지 해수부가 내놓은 정책이 구두선에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에 일문일답으로 올해 1년만 그렇다,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증액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다고 해서 감액을 했다가 그것도 조금 줄인 것이 아니라 대폭 줄였다가 또 여건이 좋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정책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만개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 부산신항, 광양항 이 두 가지 항구에 대한 말씀이 중점적으로 나오니까.

두 항구가 우리 국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그런 항구이고 앞으로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항구가 어디 부산항, 광양항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오늘 예산개요를 보게 되면 일반항도 있더라고요. 항만을 제가 어떻게 분류하는지 여태까지 해수부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부산신항, 광양항 나오고 평택항, 인천 북항 죽 나오고 여러 개 나온 다음에 일반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에서 무슨 항은 항이고 나머지 항구는 일반항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리고 여기 일반항 이렇게 되어 있는 항구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숫자는 세어 보지 않았지만 한 20여개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대산항, 우리 지역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항은 다 반영되어 있어요. 다른 항은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대산항 같은 경우는 이미 1999년도에 설계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알고 계세요, 설계 마친 것 알고 계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文錫鎬委員** 금년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항구들 보면 금년에 설계 끝난 항구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장관님, 물동량 예측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셨어요? 대산항의 물동량예측을 해보셨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조사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文錫鎬委員**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산항 인근에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중합화학 3개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그 공장 오게 되면 대산항 일반부두 건설 안 해 가지고는 엄청난 물류비용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항공도 있고 여러 회사 많습니다. 이 항구가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물류비용 추가액이 연간 수백 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더구나 기아자동차 들어오게 되면 그 손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산항, 광양항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항구 건설할 때 이것이 일어난 안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예산배정 받아서 지금부터 공사 시작해야 2006년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그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내년 예산 반영 안 되어 버리면 2006년까지 매듭지을 수 없어요.

국토의 균형발전 중요합니다. 부산항, 광양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여기 나와 있는 일반항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왜 영남권, 호남권만 신경 씩니까? 장관님, 충청도는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더구나 큰 정치하시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좀 살펴주십시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다시 좀 올리시도록 하십시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경청사에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들 모두가 반대한다, 대전이전 반대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화의 오류.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 이전 저는 굳이 찬성도 안하고 반대도 안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청사 문제에 관련되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에 짓든, 대전에 짓든, 부산에 가든, 서울에 짓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지역으로 한정해서 어디이기 때문에 안 된다, 어디는 가능하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지난번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필요하면 지어야지요. 거기에 해경청장으로서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시끄럽게, 뻔한 일 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이 상임위 시끄럽게 만든 것 해경청장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령 있게 답변 못하셨어요. 뭐 직원들이 어떻고 뭐 회의를 했는데 안한 것처럼 답변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이따가 답변하실 때에 진짜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예산안심의도 하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명분에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에 짓든 다 예산배정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봐도 또는 주관적으로 봐도 해경청사 새로 지을 필요는 있어요. 너무 비좁고 낡았습니다. 해경들 참 어렵게 근무하는데 좀 사기 올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들어서 짓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간에 합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錫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李方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을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보완해서 답변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李方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태도와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李方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협의 신용대표이사 임명에 관해서 장관이 추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 의미에 있어서의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상 소개한다는 뜻을 표현할 때 법적 조항과 관계없이 추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을 추천이라는 말을 취소하고 소개라는 뜻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方鎬委員** 장관님이 소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추천 안 했으면 그만이지 또 소개라면 장관이 수협 인사에 사람을 소개하고 그런 것은 할 일입니까? 없는 것으로 해야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方鎬委員**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은 좀더 생각하셨다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다 끝나고 총체적으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러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鄭長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委員** 저녁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항만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하셨습니다만 장관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항만계정에 대한 배분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먼저 듣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교통세 배분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과 장관급에서 실무적으로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과정에서 그것이 고쳐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배분비율이 항만분야에 10%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배분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鄭長善委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A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PA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컨테이너부두공사 예산과 PA 예산 문제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PA가 도입될 경우 많은 우려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부두공단 같은 경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2,800억원의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하고 또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만약에 내년에 PA로 넘어갔을 경우 가령 부산항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953억이고 인천항은 38억인데 이 중에서 약 6개월간 수입인 496억원이 부산PA나 인천PA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약 3,000억 가까운 재원부족액이 생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과 업무의 변화에 따른 수입지출변화도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지, 저는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제가 쪽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원론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충실히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10개년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30년계획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원론적인 기본방향밖에 될 수가 없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또 앞으로 분야별로 이 해양개발기본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될 것인지, 예산과 수반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 관련 질의입니다.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사업일 수도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평택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3개월 동안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공문 이 한 페이지 얻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해수부에서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물량을 전반적으로 분산해야 한다, 인천에 체선·체화가 많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어서 분산하는 의미에서도 저는 평택항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 수도권의 중심역할이고 또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모두 경기도가 전국 시·도별 예산확보율로 봐서 7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의 물류분산이라는 여러 가지 목표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해운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약 56% 그 다음에 충청도까지 포함하면 60%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2단계 건설사업 중에서 3개 선석을 정부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해 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늦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鄭長善委員** 이번에 위원회에서 증액시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물론입니다.

○**鄭長善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협문제입니다.

수협에 1조2,000억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만한 운영과 최근에 나타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조2,000억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을 경우 앞으로 경영정상화가 무리없이 진행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또 지금까지 발생된 도덕적 해이를 앞으로 막으면서 수협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방안도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관리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인근해역을 중국·일본·러시아 유조선들이 많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청장님?

그래서 대형오염사고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번 감사때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여수나 어느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직접 실전과 다름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있으면, 그리고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경청에 대해서도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볼 때는 마치 타당성이 있어 이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어느 지역으로 못 가서 반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경청의 기본입장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옮겨야 되느냐, 왜 새로 지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확실한 의견이 있으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元喆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委員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보면 금년보다 내년의 수산예산이 2% 정도 늘어나 38%에서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부문에 비해서 비율이 다시 조정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조조정 사업의 감척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예산은 거의 다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바람직하지 못한 축소예산이 역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어자금인데 그레도 해수부가 노력을 해서 1조2,050억 정도를 2000년 수준으로 대략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책자금 운용규모를 동결했다고 하는데 물론 어민들이 다다익선 이겠습니까마는 지금의 영어자금 정도로 과연 가능한지,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협이 최근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경제사업을 하는데 약 2,700억 정도의 경제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이라든지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어장이 많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장관님이 여기에서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르는 어업을 육성시켜서 연근해 수산자원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2000년의 566억에 비해서 399억으로 역시 167억이나 감소되면서 과연 기르는 어업이라는 문제를 얼마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기르는 어업이 잘 되려면 역시 우리나라 연안의 바다가 깨끗하고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항구 근처의 연안어장은 들어가 보면 TV에서도 많이 방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쓰레기와 오물로 덮여가지고 어장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상실하고 있는데 이런 오염속에서 과연 기르는 어업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쭙어 보고 싶고

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도 220억을 요구했는데 금년도보다도 15억이나 감액된 85억밖에 되지 않는데도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숲가꾸기사업은 결국 IMF 이후 실업자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깎여서 우리가 예산소위에서 증액해 가지고라도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숲가꾸기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자고 그러는데, 그와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경제대책하고 아울러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농산물유통문제인데 장관님의 기초발언에서 보면 직거래에 역시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직거래라는 것은 전체 유통의 5%정도밖에 선진국에서도 하지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통의 단계는 축소할지는 모르지만 유통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요 정책으로 자꾸 밀고 나가려는데서 결국 적자를 가지는 그런 직거래사업장이 자꾸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서 분석해서 그 피드백의 결과 가지고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문제만 하더라도 1,270억 규모에서 그것도 269억이나 줄어든 1,001억 정도의 그런 규모로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유통센터, 물류센터 이런 것을 하는데 하나 건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면 소비자가 어디 가서 살 적에 이 축협이 최고기 판매장을 보더라도 농협이 하고 있는 것처럼 최고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 가지고 다른 농산물도 다 살 수 있는 데로 사람이 많이 가지 최고기만 파는 데로는 사람이 안 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산물만 파는 데로 사람이 가지를 앓고 다른 것하고 다양하게 이것이 연관되어야만 윈스톱 쇼핑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여간 수협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 차라리 농협사람이 생선을 직접 사다가 판매하는 것은 막 활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수협하고 같이 하기만 하면 사업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구색을 갖춘 이런 물류센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산물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걸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이런 유통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69억이나 예산이 줄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수산물유통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해경청장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이 여러 가지 청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작전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대로 해군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세청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의 행정적인 협조절차가 서로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소신껏 얘기를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泳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鎭委員 金泳鎭 위원입니다.

한·일·중어업협정과 어족자원감소 및 어장의 축소로 인해서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기르는 어업육성을 위해서 기르는 어업육성법을 정부입법으로 지금 제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기르는 어업의 경우 398억5,800만원에 그치고 있어서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고 있는데 기르는 어업관련 예산이 이처럼 대폭 감축되면서 기르는 어업육성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적조문제, 밀식과 무면허, 유류오염방지, 불가사리 제거, 해양쓰레기 수거 이 5대 조건을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의 수산업이 제대로 자

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반영 내용을 보면 미흡하기도 하고 또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아무래도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양에너지개발 문제가 아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 해수부예산을 보면 5억원을 지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5억원은 국내의 시화호, 가로림만 등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용도로 그 다음에 국제협력사업으로 2억이 한·인도해양에너지개발 공동연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울돌목에 대한 조류발전 이것이 아주 대단히 필요하고 지난 번에 저명한 학자들까지 초청해서 우리 국회 통일농어업의정연구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거기서 제기된 자료들을 해수부에 제출하고 예산반영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지금 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울돌목뿐만 아니라 지금 강화도 그 다음에 삼천포의 늑도 또 제주도의 우도 여기도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내 해양에너지 개발예산에 수립된 3억의 예산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개소를 다 합해서 19억 정도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19억의 예산증액을 검토해서 한번 우리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견해를 한번 내주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악신도시, 해양주제공원 건립지원의 필요성을 해수부장관께서 확인을 다 구체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당국에 요청했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제가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해수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신청한 예산, 이 문제를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한번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10억의 실시설계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의 승증으로 이렇게 해서 예결위 본회의에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할 그런 생

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께서 저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하신다면 2001년도 해 양주제공원 건설추진과 관련한 실시설계비 10억을 순증을 하는데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예결위 본회의에 적극적인 노력을 같이 함께 기울여 갔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와 관련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해조류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치 미설정 문제라든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源委員 저는 위원님들께서 광범위하게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역시 우리 해양수산부 업무 가운데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수산물 검사문제, 말하자면 꽃게사건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네요.

그것을 좀 개선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 국감 때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2001년에는 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지 약간의 의문이 갈 정도로 별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국립수산물검사소 지원 이것만 해도 금년도 예산이 14억9,1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8억4,400만원으로 오히려 6억4,7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검사장비 구입운영 여기에 6억9,700만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검사장비 구입은 6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청사 임차, 증축이 2000년도에 9억3,000만원에서 1억4,7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한 7억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6억9,700만원 검사장비 구입운영으로 배정된 이 예산은 순증입니까, 순증은 아니지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순증은 아닙니다.

○張誠源委員 순증은 얼마나 되었어요?

○海洋水産部次官 洪承湧 검사장비 때문에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張誠源委員 그것이 원산지 관리에서 검사장비 확충해 가지고 5억원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海洋水産部次官補 金成洙 원산지관리 그 부분의 예산이 6억인데요 그 중에서 5억이 장비구입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니까 원산지 관리 예산 가운데 검사장비 확충이 5억원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금방 차관께서 말씀하신 수산물검사소 지원 그 5억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순증 5억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海洋水産部次官補 金成洙 같은 내용입니다.

○張誠源委員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원산지 관리 항목에도 나와 있고 또 국립수산물검사소 지원항목에도 나와 있고 이중으로 계산되어 있는 셈 아닙니까?

내년에는 아닌 말로 제2의 꽃게사건 같은 것이 터지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금년에는 꽃게사건 같은 것이 터졌지만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만 해도 예산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검사가 안 되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드렸지만 내년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검사장비도 불충분하고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제2의 꽃게사건이 또 터진다 하면 그때 국민들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금년에는 용서를 했지만, 이해를 했지만……. 왜 이런 것은 아닌 말로 기획예산처 설득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딸 수 있는 것들인데 왜 노력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국립수산물검사소 그것 담당하는 직원들 한 120명 되지요? 120명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安國全 125명입니다.

○張誠源委員 내년에 좀 늘립니까? 안 늘리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22명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의 일체의 조직인력의 증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여러 차례 협의했습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의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와 이렇게 증원협

의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예산은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반영했는지 여부를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지금 대답을 못 드리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張誠源委員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조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검사장비 5억원 충분한 것 이에요? 5억원 증액이 되면 장비구입하시는데 충분하겠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늘릴 때는 과감하게 늘리자고요.

그래서 이런 꽃게 같은 것이 다시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러니까 낚 같은 것에 대비해서 100% 검사를 위한 인력증원이란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중국에서 말하자면 공장지정제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필증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이런 등등의 다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다이옥신 등 몇몇 개의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검사장비가 부족하고 또 장비는 있는데 전문 기술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22명은 꼭 보완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까지의 일체 증원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면 내년 2월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 두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내년 2월이 지나면 꼭 되도록 그 인력증원 문제는 극력 힘쓰겠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을 2010년까지 5조원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100억원 정도 출연하네요?

이것을 언제 하지요? 백년하청 같은데.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은 계획이 여러 가지로 짜여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입법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張誠源委員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출연을 안하시고, 100억원 출연해 봐야 뭐해요? 아닌 말로 코끼리 비스킷 같은데 이것 100억원 출연하지 마시

고 다른 데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지겠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것을 법은 통과시켜 놓고 해수부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 예산은 못 만들어 놓고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 해서 이것이라도 달라고 짹짹 빌고 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놓고 봐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것이라도 최소한의 종자돈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는 성의표시로 우리로서는 열심히 이것도 예산투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의 기금조성계획안을 만들어서 이미 보고드린 바도 있고 또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련된 법안도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는 대로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張誠源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權五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五乙委員 본 위원은 다른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담당국장 어느 분이시지요?

내수면어업이 실제로 적용되는 분야가 해수하고 내수면이 접하는 주로 거기에 해당되지요? 내륙에 있는 호수는 해당은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예산배정을 합니까?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宰永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權五乙委員 한 1억 정도 합디다. 그런데 전국에 강원도 소양댐, 춘천댐, 화천댐부터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 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 해서 현재 34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해수와 내수가 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하고 예산배정을 하는데 실제로 내수면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투자해야 됩니다.

1억 맞지요? 내륙의 호수는 1억 맞지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宰永 예.

○權五乙委員 그 예산 있으나 없으나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거기서 치어방류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도 예

산을 좀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 해수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매칭펀드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투자하도록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원 아납니까?

내수면연구소도 보면 전부 다 해변가에 되어 있지요? 정말 내륙에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당국장께서 유념하셔서 예산소위에서 심의할 때라든지 또 내년에 정책입안 시행할 때도 실제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큰 호수, 댐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張誠源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말씀하세요.

○**張誠源委員** 한나라당 위원님들 서면답변 받으실 용의 있으세요?

○**權五乙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張誠源委員**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張正彦委員**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장관님이 이것은 매우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장관으로서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어촌종합개발, 어항종합개발계획하고 이렇게 전체를 한번 조정해서 조금 전에 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張正彦委員**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충남 서천군, 경기 안산시, 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군, 제주 북제주군 이렇게 5개 지역을 심사해서 아주 계획은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 참 답변이 쉽지를 않습니다.

○**張正彦委員** 우리 소위에 이 부분을 좀 넘겨주십시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委員長 咸錫宰** 朴容琬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容琬委員** 다른 것은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해경청장님 또 나와서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아주 간단히 아까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토 달고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열심히 쓰신 것 다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히 1분 내에 대답 좀 하시고 끝마치는 것으로 하지요.

○**海洋警察廳長 金宗佑** 지금 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청사신축은 저희 직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그래서 개정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연도 건축예산은 저희들 사기를 고려해서 우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張誠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張誠源委員**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서면답변 받으시겠다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그렇습니까?

金龍學 위원님은 질의하시면서 보충질의 하시려고 잔뜩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金龍學委員** 괜찮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다 서면으로 답변해도 충분히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金龍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도 대단히 아프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더라도 金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새기고 아주 합리적이고 설명이 뚝뚝하도록 그렇게 계획들을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할 것을 구두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부분에 관한 것도 전부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보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검정시스템 같은 것도 아울러서 다 답변에 담아서 성의 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 위원님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러시면 서면답변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간결하게 해서 그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權五乙委員**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짧게만 해주십시오.

○**委員長 咸錫宰** 군살 빼시고 짧게 말씀하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아까 제가 소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소개는 합법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수협의 상황이 스스로 꾸러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과도기적인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해수부가 좀 도와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委員長 咸錫宰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개라는 말은 빠시고 추천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추천이라는 말은 아까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추천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라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추천이라는 말은 법률적 의미에서의 추천은 아니다 라는 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委員長 咸錫宰 예.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러시면 金宗佑 청장 답변도 다 서면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시간 제약으로 질의를 다 못하시고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질의 위원님과 질의제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朴燾太 위원님의 부진한 1·3종 어항건설 투자대책 등 2건, 張正彦 위원님의 수산물 유통구조 예산증액대책 등 5건, 朴在旭 위원님의 항만건설 활성화 대책 등 10건, 朴容琥 위원님의 해양오염방지대책 등 2건, 李相培 위원님의 내수면어업의 활성화 대책 등 6건, 孫泰仁 위원님의 항만투자 확대의 필요성 등 6건, 金泳鎭 위원님의 해조류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 미설정 등 3건, 朱鎭旻 위원님의 독도 관련 사업예산 등 6건 등 여덟 분 위원님으로부터 40건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동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서를 함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원회 위원 명단이 일부 교체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元喆喜 위원님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이신 張誠源 위원님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7분 산회)

○出席委員(20人)

姜賢旭	權五乙	金泳鎭	金龍學
文錫鎬	朴容琥	辛卿植	朴在旭
朴燾太	孫泰仁	元喆喜	李相培
李方鎬	張誠源	張正彦	鄭長善
鄭哲基	崔善榮	咸錫宰	許泰烈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金基英
전문위원	張仁植
입법심의회관	李元鐸

○政府側參席者

농림부			
장	관	韓甲洙	
해양수산부			
장	관	盧武鉉	
차관	관	洪承湧	
차관보		金成洙	
해양정책국장		李龍雨	
해운물류국장		程伊基	
항만국장		金英南	
수산정책국장		安國全	
어업자원국장		朴宰永	
국제협력관		金炯男	
안전관리관		徐廷皓	
해양경찰청			
청장		金宗佑	
차장		李炘祐	
경무국장		李尙奎	
경비구난국장		林世鎬	
정보수사국장		崔廣賢	
해양오염관리국장		安兌煥	

【報告事項】

○議案回附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안(김영진 의원 대 표발의)

(11월28일 김영진·정균환·이해찬·김옥두·장성원·강현욱·문석호·박용호·이상수·이정일·장정인·정세균·정장선·정철기·최선영·한명숙·강성구·고진부·김경재·김원기·김윤식·김충조·김태식·김택기·김효석·김홍일·남궁 석·유재규·박병윤·박상천·박종우·박주선·배기운·송영진·송훈석·이근진·심규섭·원유철·이강래·이낙연·이용삼·이윤수·이원성·이인제·이창복·이희규·천용택·한화갑·홍재형 의원 외 69인 발의)

11월28일 회부됨